

공공기관 및 미래형 혁신도시 영주 유치를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207
----------	-----

제출년월일 : 2005. 7. 15 .

제 출 자 : 김재홍의원의 18인

1. 주 문

“불입과 같음”

2. 제안이유

- 참여정부는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명제 아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도별 배치 방안이 발표되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경쟁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市도 우리道로 배치된 13개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형 혁신도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경북·충북·강원 3도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전통적 농업도시로 광역(道)단위 축산기술연구소, 품기인삼시험장, 농업 선진화 기술연구소 등이 소재하고 있어 앞으로 농업기술연구를 위한 클러스터 형성이 용이한 우리 영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12만 시민과 우리시 의회의 확고한 결의를 대·내외 천명하고
-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의지와 달리 정치적 논리로 대도시 근교나 공업화가 이루어 진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될 경우 강력한 불복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기타사항

- 결의안 송부처 : 11개 기관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경상북도, 경북도의회

공공기관 및 미래형 혁신도시 영주 유치를 위한 결의(안)

우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중앙중심 사회구조를 혁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 분권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과 6월 24일 발표된 시·도별 배치 방안에 대해 큰 기대와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정책이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 발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와 낙후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도시, 특히 영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우리 영주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과 접근이 1시간대로 가능하며, 경북·충북·강원 접경지역으로 이미,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평창과 3도 접경지역 행정 교류회를 맺어 중동부 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심도시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혁신도시가 영주에 건설된다면 경북 북부권 뿐만 아니라 국토 중동부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2만 시민의 한결 같은 소망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道로 배치된 13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미래형 혁신

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 측면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영주에 유치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도시 근교나 공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정부에서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으로 적극 반대한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 발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왔던 지방 중·소도시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영주를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제 지역 자체의 자력발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와 道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 12만 영주시민과 우리 의원 일동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정부 관련부처와 경북도에 전하고, 영주시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만약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정치적 논리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될 경우 강력한 불복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 7. 19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